

막혀있는 비상구
엷히고설킨 전선

달라진게 없는 전통시장 화재 대책

추석 앞둔 광주·전남 전통시장 보니

자동화산소화기 갖춘 곳 없고 스프링클러 설치 39% 불과
대피 통로엔 위험한 LPG가스통 방치...불 나면 대형사고
안전 취약 요소 곳곳 노출...무신경 자치단체들 외면 여전

전통시장의 열악한 안전 관리 실태가 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안전 취약 요소가 곳곳에 노출돼 있는 불안한 상황이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먹고 살기 바쁜 영세 상인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안전'에 투자하는 데 주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들은 '괜찮겠지'라는 낙관주의에 기대 무신경하게 외면하고 여전한 실정이다.

지난 21일 새벽 청량리 청과물 시장 점포와 창고 20여곳이 불에 탄 화재가 계기로 둘러본 광주 지역 주요 시장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자동화산소화기·스프링클러·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은 여전히 미흡했고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 불 꺼진 피난 유도 등 등으로 대형 화재시 막대한 피해를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만했다.

◆낡은 소화·전기설비 개선은 언제쯤-전통 시장의 경우 노후 건물에 미로같은 통로, 피난 통로 곳곳에 쌓여 대피를 어렵게 만드는 적치물 등으로 초기 진화가 안 되면 화재가 급속도로 번지는 불안한 구조에 노출돼있다.

대표 전통시장인 광주 양동시장도 비슷했다. 추석맞이 제수용품 구매하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지만 통로는 미로같이 얽혀있었고 곳곳에는 불에 타기 쉬운 나무나 종이 등 적치물들이 가득 쌓여있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던 대형 화재 상당수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자동화산소화기·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요구되지만 양동시장에서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지난해 실시한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 결과는 열악하지만 개선은 더딘 전통시장의 안전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 내 통로, 계단,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에 설치된 자동화산소화기는 전무했다. 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광주지역 122개 점포 중 40곳만 설치됐다. 전남은 129곳 점포 중 34곳만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시장도 극히 드물었다. 광주지역 전통시장 중 설치 대상 점포는 293곳이지만 고작 39.3%(117곳)만 갖춰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그나마 시장 공용공간에 비치해놓는 수동식 소화기의 경우 광주 10개 전통시장은 100%인 반면, 전남 12개 전통시장에서는 고작 절반 수준인 58.3%에 머물고 있었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도 중 충남(33.33%)에 이어 2번째로 낮다. 공용 공간에서조차 이런 상황인데, 개인 점포별 안전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전남지역 전통시장 점포 마다 설치한 수동식소화기 비율도 43.9%에 그쳐 대구(35.8%)를 빼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식용유 등 기름을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하기 좋은 K급 소화기를 갖춘 광주지역 전통시장 점포는 고작 1곳 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은 "1년 전 결과 보고서인에도, 광주·전남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안전 대책 개선이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막혀 있는 비상구, 꺼진 유도등=전통 시장의 피난구 유도등·통로유도등 등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 특히 복잡한 미로구조가 특징인 전통시장에는 절실하다.

광주지역 전통시장의 경우 그러나 설치되지 않은 시장도 많다. 설치됐더라도 찾아보기 힘들고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가게들이 내놓은 짐 때문에 겨우 다닐 정도에 불과한 비좁은 통로 구간은 비상시 대피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양동시장 내 2층 건물로 올라서는 폭 1m도 되지 않는 좁은 비상구 계단에는 LPG가스통 2개가 놓여있어 긴급한 대피 상황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화재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도 광주지역 10곳의 전통시장 중 유도등·비상조명을 설치한 점포는 1000개가 넘는 대상 시설 중 고작 14곳에만 설치된 것으로 지적했다. 그나마 14곳 중 2곳은 충전 불량으로 불이 들어오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시 불을 끄는 데 효과적인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나 제연 설비를 갖춘 시장은 전무했고 비상벨·단독경보감지기 등을 갖춘 곳도 손으로 꼽았다. 단독경보감지기의 경우 설치된 됐을 뿐 대부분 불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실시한 광주10곳, 전남 12곳의 전통 시장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진단결과, 광주지역 전통시장 소방시설 안전등급은 B등급 2곳, C등급 5곳, D등급 2곳에 머물렀다. 최근 화재가 발생, 수습여부의 점포가 불에 탄 청량리 시장의 안전등급은 C등급이었다.

전남도 B등급 2곳, C등급 4곳, D등급 4곳, E등급 2곳으로 나타나 지역 전통시장 화재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27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LPG가스통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위험스럽기만 하다.



27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노점상 인근에 인화물질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나무와 종이 박스들이 버려져 있다.

“국립대 조교는 교육공무원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홍보담당관 해고 무효소송 패소

국립대 조교로 임용됐다면 교육공무원이나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된 만큼 조교로서 통상적 연구가 아닌, 홍보 업무를 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는 전 전남대 홍보담당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소송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국립대의 계약직 조교는 공무원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을 맡은 광주고법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여 그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전남대에 계약직 홍보담당관으로 채용된 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다. 학교측은 이후 기간제법에 따라 A씨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A씨를 조교로 임용해 1년 단위로 재임용해왔지만 2014년 계약이 끝났으며 돌연 해고를 통보하자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를 기간제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 신분 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조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할 위한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확진 통보 받고도 공사현장에
60대 남성 벌금 200만원 선고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도 병원 대신, 공사현장으로 일하러 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선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밤 11시 35분께 “코로나19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집으로 구급차를 보냈더니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라”는 연락을 받고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공원 등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영광지역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일을 하는 등 정부의 방역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일탈·갑질 기초의원들 경찰 수사 받는다

불법 수의계약·일감 몰아주기
광주시 북·서구의원 7명
시민단체가 고발장 제출

일탈행위를 저지르고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한 지역 기초의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지역 시민단체가 공무원노조

와 공동으로 지역 기초의원들의 비위 행위를 경찰에 고발키로 하면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공천한 민주당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참여자치 21은 28일 진보연대,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등과 함께 광주지방경찰청에 광주시 북·서구의회 기초의원 7명의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27일 밝혔

다. 이들이 경찰에 고발키로 한 기초의원들은 북구의회가 6명(기대서, 이정철, 백순선, 선승연, 이현수, 전미용)으로 가장 많다. 서구의회는 강기석 의원이 고발 대상자 명단에 올라있다.

시민단체 등은 이들 기초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인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백순선 의원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업체로 67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고 선승연 의원은 선배가 운영하는 기업의 구청 입찰 참여를 지원하는 등 주머니 아닌, 특정기업을 밀어주기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미용-이현수 의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수백만원 대 꽃을 구정에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고 강기석 서구의회 의원은 의회 예산으로 구입한 기념품을 임의로 나눠준 사실이 밝혀

져 물의를 빚고 있다. 기대서 의원과 이정철 의원도 의원직을 활용, 업체 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으로 경찰 고발장에 이름이 올라갔다.

기우식 참여자치 21 사무처장은 “이미 관련 혐의로 인해 수사가 진행중인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기관을 통한 수사진행 여부 확인이 어려워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의원 전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이번 고발조치로 비위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체결하거나 지인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백순선 의원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업체로 67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고 선승연 의원은 선배가 운영하는 기업의 구청 입찰 참여를 지원하는 등 주머니 아닌, 특정기업을 밀어주기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미용-이현수 의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수백만원 대 꽃을 구정에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고 강기석 서구의회 의원은 의회 예산으로 구입한 기념품을 임의로 나눠준 사실이 밝혀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